

생활 시설 낙후·인프라 부족...전남 인구 소멸 위험 가속

농촌소멸 위험지역 91개·고위험지역 51개...전국 두번째 높아 인구감소지역 16곳 지정...나주 등 일부 거점지 인구 밀집 영향

전남 22개 시·군 51개 읍·면은 소아과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으려면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의료·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승용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726개 읍·면이 농촌소멸 위험 또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농업부문과 농촌인구 부문이 각각 550개, 986개다.

전남에서는 농촌소멸 위험지역으로 91개, 고위험지역으로 51개가 선정됐다.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전남의 경우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농업생산기반은 유지되고 있지만, 인구 감소·고령

화 현상으로 인해 농촌인구 부문의 소멸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출산 감소 및 사망 증가 등 자연 감소 외에 다른 지역 대비 낙후된 시설과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 부족 등이 농촌인구 소멸 위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흥, 강진, 담양, 구례, 고흥 등 16개 지역은 농촌소멸위험지역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나주시 등 5개 시 단위 지역은 농촌소멸 위험지역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꼽히지 않았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등 각 지역 내 정주여건이 비교적 발달한 일부 거점지에 인구가 밀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주시만 놓고 보면 구도심, 빛가람혁신도시 등 3개의 도시지역과 1개의 농촌 중심지가 지역 내

거점을 형성, 나주시 전체 인구의 67.5%가 4개 거점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촌 마을로는 23개의 중심마을과 185개 일반마을, 102개 과소마을에 전체 인구의 29.4%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20명 이하의 소규모 분산주거지도 1095개나 된다.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보니 일부 거점지에만 지역민이 밀집되고 여기에서 소외된 농촌 지역은 소멸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KREI 관계자는 "인구 감소폭이 크지 않더라도, 농업활동은 위축되고 있으며 농업소멸대응 정책과 농촌인구 대응 정책은 구별돼 수립·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농촌 구분 및 정책 동향 연구를 통해 진행됐으며, 국가 농촌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정주여건 분석 등은 국내에서도 공간적 특성이 다른 네 개 시·군(광주시, 전남 나주시, 충북 괴산군, 강원 정선군)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국내산 신제품 농산물 수출 설명회

농촌진흥청과 지원계획 설명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촌진흥청(농진청)과 함께 지난 25일 전주 농진청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신제품 농산물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산 신제품 농산물을 수출업체와 생산 농가에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배, 포도, 키위 수출통합조직 등 생산 농가들과 수출업체 15개사가 참여해, 농진청에서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신제품 농산물 가운데 ▲배(그린시스·신화) ▲포도(젤리팝·썸머크리스피 등) ▲키위(스위트골드·감황) ▲마늘(홍산)을 설명했다.

이어 aT는 신제품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생산지원부터 바이어 알선 및 해외 마케팅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신선 농산물 바이어

를 온라인으로 설명회에 참가시켜, 사전에 제공받은 신제품 농산물 샘플 관련 피드백을 전달하고, 행사에 참가한 농가와 수출업체들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했다.

aT와 농진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신제품 농산물이 해외시장에 더욱 많이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지원부터 해외 판촉까지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 청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수한 신제품을 육성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수출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기후변화 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농업·농촌이 마주한 현실이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수한 신제품이 국내와 해외로 널리 보급되고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더 쉬워진다

전국 최초 협의체 시·군까지 확대 처리시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 기대

전남도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운영해온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운영해, 처리 시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올 하반기 임대농지를 재계약하는 2만 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는 기존에 농업인 이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을 한 뒤 농지대장과 농

업경영체등록 변경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곳을 직접 찾아 신고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영체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처리한 임대 변경사항을 확인, 농가 신청이 없더라도 직접 전화(아웃콜)나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처리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선 농어촌공사의 임대 변경 사항을 농지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이를 즉시 반영, 등록 처리한다.

올 하반기에는 보다 효율적인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위해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운영해 읍면동 농지대장 및 직불금 담당자, 농관

원 사무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 서비스 방법을 논의해 운영한다. 협의체 확대·운영으로 그동안 직불금 신청 기간 임대계약이 집중돼 농업인 접수 대기 시간 및 기관 간 업무처리 소요 시간이 증가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교통이 취약하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 임대계약 시 겪는 불편함 해소 등 농업인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처음 운영해 농지대장 서류 발급은 전년 대비 6만 건(25%) 감소하고 농관원 방문 민원도 8000명(1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원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1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브랜드평판이 가장 우수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연구소)가 농식품부 공공기관 12곳의 브랜드평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593만 7362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연구소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농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652만

457개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브랜드 평판을 분석한 결과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산출됐다.

가장 우수한 평판지수를 획득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참여지수 77만 6630, 미디어지수 154만 9798, 소통지수 227만 6695, 커뮤니티지수 38만 1705, 사회공헌지수 95만 2535를 획득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86만 9577), 한국마사회(207만 7778), 축산환경관리원(132만 7874), 축산물품질평가원(115만 6117) 순으로

높은 브랜드 평판지수를 기록했다.

뒤이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국제식품검역인증원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농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빅데이터 1532만 2915개와 비교해서도 7.82% 증가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정부, 벼멸구·호우 피해 농가서 벼 4만 6457t 구매

지난해보다 3.7배 늘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확산과 호우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벼를 구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5일까지 집계한 농가의 구매 희망 물량은 4만 6457t이다.

이는 지난해 피해 벼 구매 희망 물량(1만 2665t)의 3.7배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료를 계속해 피해 벼 등급을 세 개로 구분하고, 구매 가격 기준을 마련했다.

잠정등외A는 공공비축미 1등급 가격의 80.77%를 지급하기로 했고 잠정등외B와 잠정등외C는 각각 67.95%, 55.13%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일 직후 중간정산금(40kg 기준 2만 5000원)을 주고 차액은 연말에 지급한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